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 SOC 투자의 방향

2022.5

엄근용

■ 서론	4
■ 국내외 경제여건	5
■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 재정정책과 SOC 투자	15
■ SOC 투자의 방향	24
■ 결론	36

- 본고는 국내 경제를 둘러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영향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SOC 투자의 방향에 대해 살펴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22년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보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3%p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연평균 120달러인 경우 경제성장률 0.4%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4%p 상승, 경상수지 5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 미국은 지난 연말부터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그동안의 저금리를 벗어나 중립금리까지 약 2%p 이상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미국 금리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금리가 1%p 상승하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1년 동안 0.52% 감소, 물가상승률은 0.02% 상승, 수출은 0.74%, 수입은 0.7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 역시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2.9조원 정도 부족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 비중은 25.0%로 프랑스 30.8%, 독일 29.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전체 30개의 OECD 가입국 중 29위이며, 2021년은 1.57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임.
-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 규모에 비해 적은 SOC의 투자는 경제성장 도모, 소득불평등도 해소,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SOC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I 서론

- ❖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엔데믹으로 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세계 유가는 연초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현재 100달러 수준으로 크게 올랐으며, 유가의 급등은 관련된 주요 상품들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개월을 넘어서고 있으며, 전쟁의 장기화 및 확전 가능성이 커지며 경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

 - 러시아 정찰기의 덴마크, 스웨덴 영공 침범, 폴란드와 불가리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신청, 독일,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 등 확전 우려가 커짐.
- ❖ 한편,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책금리를 일정 기간 중립금리 수준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5%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8.5%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 3월 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p 인상하였으며, 5월 회의에서 0.5%p 인상함.
- ❖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물가상승 폭은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어 대내외 경제여건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속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2022년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한 가운데 생산자물가상승률은 8.8%를 기록함.
 - 이미 해외 주요국가들은 농산물 중심의 인플레이션인 애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긴축정책이 지속되는 경우 세계경기 위축과 더불어 국내 경제가 위축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적절한 SOC 투자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SOC 투자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경제여건, 재정정책과 SOC 투자의 효과,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SOC 투자정책의 방향을 검토할 것임.

II 국내외 경제여건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유가 및 인플레이션 변동)

■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최근 까지 지속되고,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주요국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

-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 對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하며 전쟁을 일으킴. 이후 미국과 EU 등을 중심으로 對 러시아 경제제재 조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상품 및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진행 중이나 의견 차이가 커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표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경제제재 내용 및 주요 경제 이슈

▲ 2월 24일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RTS 지수 39% 폭락, MOEX 지수 33% 폭락
▲ 2월 26~28일 : S&P가 러시아 신용등급 '투자부적격' BB+로 강등, 루블화 30% 폭락, SWIFT 시스템에서 러시아 은행 퇴출
▲ 3월 2~4일 : EU 7개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에 대해 SWIFT 배제, S&P 러시아 신용등급 'BB+' → 'CCC-' 8 단계 하락
▲ 3월 8~9일 : 현대자동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중단, 피치가 러시아의 신용등급 'B' → 'C'로 낮추고 디폴트 의견 제시, EU 가상화폐와 해운 산업 분야 제재, 미국 하원 9일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석탄 수입 금지
▲ 3월 11일 : EU 러시아산 철강제품 수입과 러시아 수출을 금지, 러시아의 암호화폐 자산 동결 발표

자료 : 박철한(2022.3),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건설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분석”.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시장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원유, 니켈, 소맥 등의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
- 러시아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상승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진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화가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상승 등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경기 하방 요인과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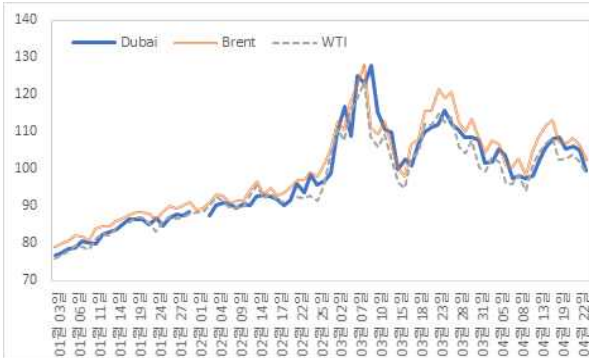
- 3월 수출은 러시아(-55.6%), 우크라이나(-95.8%)에서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두 국가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EU(-2.0%)에 대한 수출도 부진한 모습을 보임.
-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2022년 3월 전년 동월 대비 4.1%의 높은 상승률을 보임.

1) KDI경제동향(2022.4).

- 주요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가 예상되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환율 변동성도 확대됨.
- 생산비용 증가, 경제제재에 따른 교역 제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라 자동차 등 주요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급격히 악화됨.

〈그림 1〉 국제유가 추이(2022.1.3~2022.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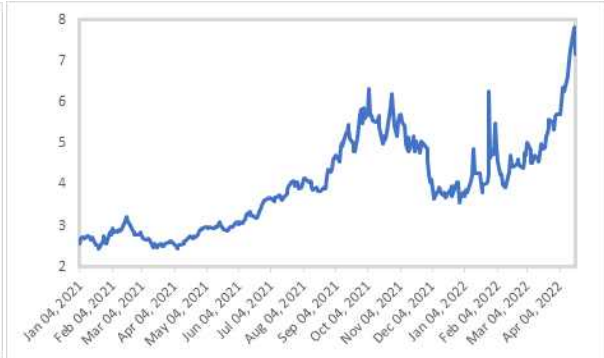
(단위 : \$/배럴)



자료 : 한국석유공사.

〈그림 2〉 천연가스가격 추이(2022.1.4~2022.4.19)

(단위 : \$/100만 Btu)



자료 : NYMEX, U.S. EIA.

■ 현대경제연구원(2021)²⁾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국제유가가 평균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보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3%p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2022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또는 120달러를 지속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VAR 모형을 구축하여 분석함.
- 국제유가가 연평균 120달러에 달할 경우는 경제성장률 0.4%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4%p 상승, 경상수지 5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표 2〉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변수	국제유가 연평균 100달러	국제유가 연평균 120달러
경제성장률	0.3%p 하락	0.4%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1%p 상승	1.4%p 상승
경상수지	305억 달러 감소	516억 달러 감소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21.10).

■ 세계은행은 2022년 유가가 2021년 대비 42% 상승한 평균 배럴당 100달러(브렌트유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³⁾

2) 현대경제연구원(2021.10), “오일쇼크 발 슬로플레이션 우려 증폭 - 국제유가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21-07.

2. 미국의 금리 인상

(1) 미국 금리 동향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 등 통화 긴축을 결정한 데 이어 5월 회의에서도 0.5%p 인상과 양적 긴축 계획을 발표함.
- 이에 따라 미국 경기의 연착륙 여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⁴⁾⁵⁾
 - 3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상당 기간 긴축기조를 강화할 것을 시사함.
 - 미국의 정책금리는 2020년 3월부터 24개월 동안 0.125%를 유지해오다가 2022년 3월 17일 0.25%p 인상을 단행함.
 - 또한, 3월 FOMC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향후 1~2회의 0.5%p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5월부터 매월 최대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 방안에 대해 동의함.
 - 5월 회의에서는 정책금리를 0.75~1%로 0.5%p 인상하고 6월부터 8.9억 달러 규모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착수할 계획을 발표함.
 - 제롬 파월 의장은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각각 0.5%p 금리 인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시사함.
 - 이에 FOMC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상향한 반면,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함.
-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를 중립금리(2.25~2.50%)⁶⁾ 수준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향후 물가상승 정도에 따라 금리 인상과 긴축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 및 긴축의 강도가 강화될 경우 미국 경기의 위축 전환 가능성도 상존함.

3) World Bank Group(2022.4), "The Impact of the War in Ukraine on Commodity Markets", Commodity Market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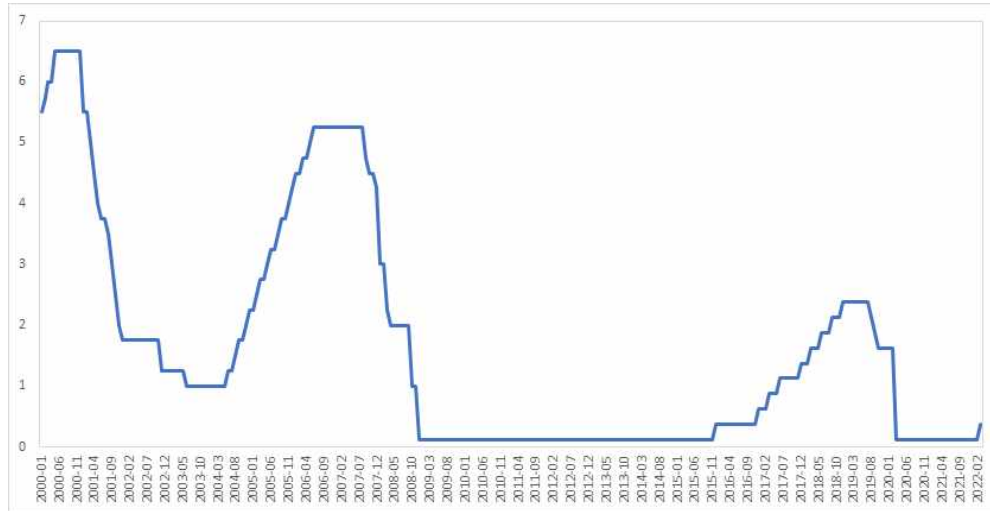
4) FOMC 회의 의사록(2022.3.15~16).

5) FOMC 회의 의사록(2022.5.3~4).

6)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금리 수준을 의미함.

〈그림 3〉 월간 미국 정책금리 추이(2000.1~2022.3)

(단위 : %)



자료 : 국제결제은행(BIS).

■ 미국은 2000년대 들어 3번의 금리 인상기를 거쳤으며, 가장 빠른 시기에는 25개월 동안 4.25%p 상승시킴.

- 1999.5~2000.6, 2004.5~2006.6, 2015.11~2018.12 등 총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겪었으며, 첫 번째 시기에는 총 12개월 동안 1.75%를 상승시켰으며, 두 번째에는 25개월 동안 4.25%, 세 번째 시기에는 37개월 동안 2.25%를 상승시킴.

■ 과거 금리 인상 시기 중 고물가 시기에 금리를 인상한 후 미국 경제가 침체에 접어들은 사례가 존재하며, 2022년은 금리 인상과 연준 자산 축소 등 양적 긴축이 함께 진행되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큼.

- 미국은 대부분 금리 인상 후 경기 연착륙이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의 위험성이 큰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금리 인상 이후 미국은 경기 후퇴를 경험함.
- 이번 금리 인상기도 미국 경제의 자신감으로 연착륙이 기대되지만, 향후 유가 상승 등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과 양적 긴축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연착륙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됨.

(2)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이 자국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GDP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물가는 하락시킴(Christiano et al., 1999; Uhlig, 2005).
- 전 세계 GDP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다른 나라들의 금리와 미달러 대비 환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시킴(Kim, 2001; Ma kowiak, 2007; Scholl and Uhlig, 2008; IMF, 2014).

과거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는 1년 4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높였으며, 저금리 기간 동안 부동산가격과 주가 상승, 환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음.⁷⁾

- 우리나라 금리 인상 시 자본유출 및 경상수지 악화, 주가 하락으로 금융위기 및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됨.
- 저금리, 저환율의 지속 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사이클에 들어가게 됨.

산업연구원의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⁸⁾, 미국 금리 인상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감소하고 물가는 소폭 상승하나 수출과 수입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Global VAR(GVAR) 모형에 부호제약 식별법(sign-restriction identification method)을 이용하여 대내외 구조적 충격(structural shock)들에 대한 우리나라 산업별 변수들의 반응을 분석함.
- 미국의 금리가 1%p 상승하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1년 동안 0.52% 감소, 물가상승률은 0.02% 상승, 수출은 0.74%, 수입은 0.71% 감소함.
- GDP, 수출, 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1990년 및 2000년보다 소폭 증대됨.

〈표 3〉 미국 금리 충격이 우리나라 산업별 변수들에 미치는 효과

(단위 : %)

	GDP	물가변동률	수출	수입
전체	-0.52	0.02	-0.74	-0.71
건설업	-0.25	-0.05	-	-

자료 : 황선웅 외(2014.12), “대내외 경제충격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14-716, pp.82.

7) 김정식(2015.6),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국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8) 황선웅 외(2014.12), “대내외 경제충격의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2014-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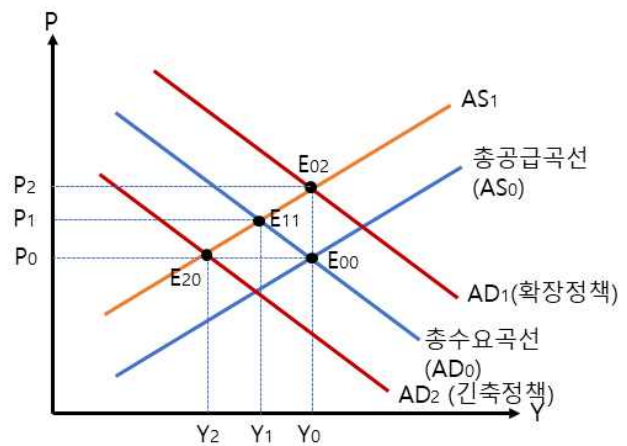
3.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

❖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불황(stagnation)과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함.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 물가는 하락하지만, 총공급 곡선이 음(陰)의 충격을 받는 경우 경기 하락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함.

- 원자재 등 핵심상품 가격이 정정불안, 기상이변 등으로 급등하는 총공급 충격 등이 주요 원인임.

❖ 총공급곡선이 AS_0 에서 AS_1 으로 이동하면 생산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정책당국이 확장정책을 통해 총수요곡선을 AD_0 에서 AD_1 으로 이동하면 생산을 유지되나 물가는 더욱 상승하게 되며, 긴축정책으로 총수요곡선을 AD_0 에서 AD_2 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유지되나 생산의 감소 폭은 더욱 커지게 됨.

〈그림 4〉 총수요와 총공급 변화



자료 : 정운찬·김영식(2008), 거시경제론, p273

(1)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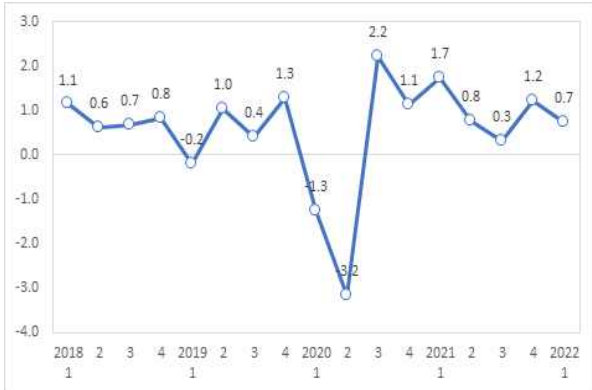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둔화된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 위축 가능성 커지고 있음.

- 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은 2020년 3분기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6월 101.8p를 보인 이후 7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음.

〈그림 5〉 분기 실질경제성장률(전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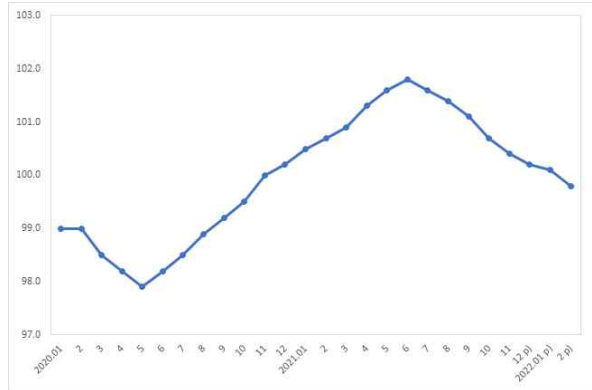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그림 6〉 월별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 한편,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은 최근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기존 2022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음.

- 현대경제연구원은 4월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기저효과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나, 거리두기 정책 완화 등으로 기존 2.8%에서 2.6%로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금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전망도 기존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함.9)

〈표 4〉 주요기관의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기관	IMF (2020.4)	OECD (2021.12)	한국은행 (2022.2)	현대경제연구원 (2022.4)	Fitch (2022.3)	Moody's (2022.3)	S&P (2022.3)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	2.5%	3.0%	3.0%	2.6%	2.7%	2.7%	2.5%

자료 : 각 기관.

(2) 경제성장률 관련 주요 경제지표 동향

❖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거나, 아직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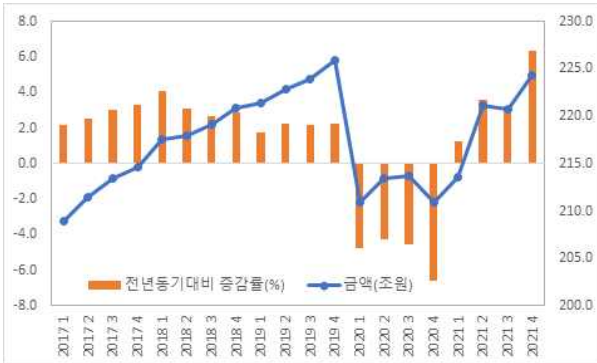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전 민간소비는 225.9조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4분기는 224.3조원 수준임.

9) IMF, World Economic Outlook-War Sets Back the Global Recovery-, April 2022.

■ 한편, 향후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p 이상을 수준을 보이나, 지난해 6월 이후 소폭 둔화됨.

- 2021년 6월 110.3p를 보인 이후 하락하여 2022년 3월 기준 103.2p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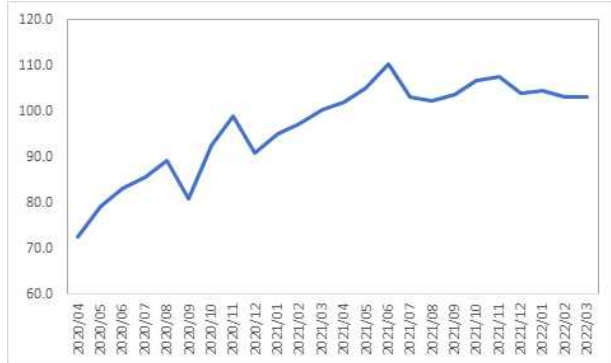
〈그림 7〉 분기별 민간소비



주 : GDP 실질금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8〉 소비자심리지수



주 : 2003~2021년 중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 방역수칙 완화 등으로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나, 물가상승, 겨울철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건설투자는 2020년 1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그 폭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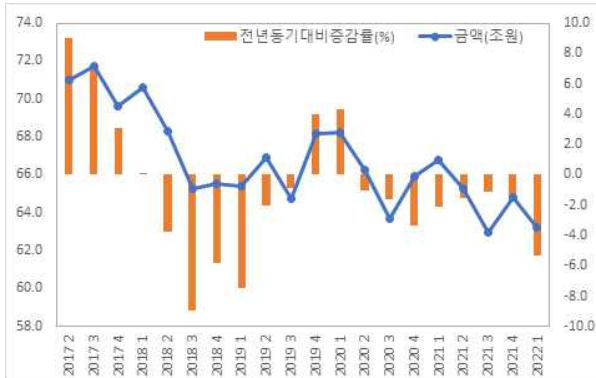
- 2020년 1분기 68.2조원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63.2조원 수준을 보임.

■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기계류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소폭의 조정이 이루어지며 감소세를 보임.

- 2021년 2분기 45.7조원을 보인 이후 서서히 둔화되며 2022년 1분기는 42.6조원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대내외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 지속으로 설비투자는 둔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림 9〉 분기별 건설투자



주 : GDP 실질금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0〉 분기별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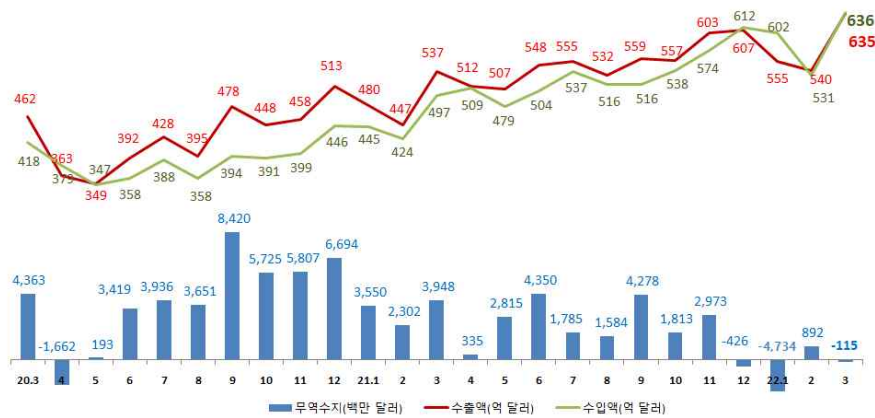


주 : GDP 실질금액(계절조정)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수출입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나, 지난해 말부터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함.

- 수출은 주요국의 엔데믹 가능성과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요 지속 등으로 호조세를 보임.
- 수입은 원유 및 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 무역수지는 수입의 높은 상승세로 최근 적자를 보고 있으며, 4월 무역수지는 26.6억 달러 적자임.¹⁰⁾

〈그림 11〉 월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추이



자료 : 관세청, 월간 수출입 현황.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승 폭이 확대됨.

-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 6월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승 폭이 확대되며, 2022년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함.
- 생산자물가지수는 2020년 12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11월 이후 다소 추춤하나 2022년 3월은 전년 동월 대비 8.8% 상승함.

10) 관세청 보도자료(2022.5.2), 2022년 4월 수출입 동향.

〈그림 12〉 소비자물가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률(전년 동월 대비)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4. 시사점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 확전 양상을 보이며,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으로 유럽 전역으로 전쟁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어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유가 수준은 평균 배럴당 100달러 내외의 수준을 보여 2022년 유가 수준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됨.
- ❑ 미국의 기준금리는 향후 있을 FOMC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중립금리 수준까지 올린다면 2%p 이상 상승시켜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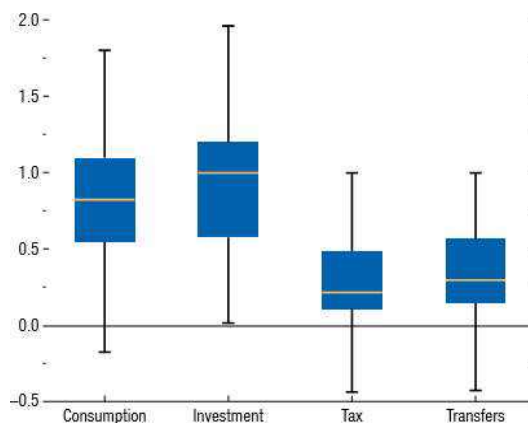
 - 미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하며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IMF(2022.4)는 미국의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전년 대비 7.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금리 인상의 기간과 폭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전망이다.
- ❑ 현재 기준 경제 여건상으로는 경제성장률은 (+)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대 수준으로 둔화시킬 것으로 보여 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Ⅲ 스태그플레이션 위기 속 재정정책과 SOC 투자

1. 확장적 재정정책

- ❖ 올해 경제는 엔데믹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경제에 부정적인 대외여건으로 경기둔화 및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 Gechert et. al.(2018)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재정승수는 평균 1 정도이며, 공공투자의 승수가 공공소비의 승수에 비해 높다고 분석함.¹¹⁾
 - 반면 조세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공공지출 재정승수 크기의 평균 1/4 수준에 불과하여 공공지출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함.
- ❖ 공공소비 1단위 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투자 1단위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하며, 건설투자와 같은 공공투자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함.

〈그림 13〉 재정승수 : 1년 시계(실질 GDP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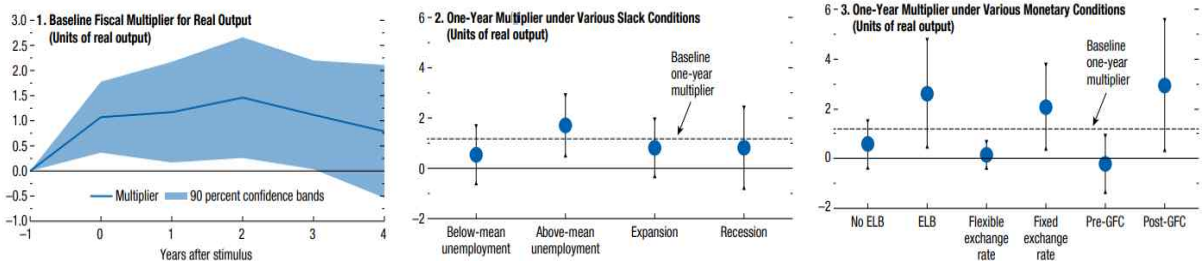
주 : 재정승수 분포의 중간값(금색선), 25분위수(파란색 박스 하단), 75분위수(파란색 박스 상단, 최대(박스 바깥선의 상단), 최소(박스 바깥선의 하단)를 의미하며, 승수는 재정수단을 GDP 한 단위만큼 변동 시 실질 GDP의 변동으로 정의함.
자료 : Gechert et. al.(2018).

11) Gechert, Sebastian, and Ansgar Rennenberg. 2018. "Which Fiscal Multipliers Are Regime-Dependent? A Meta-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2 (4) : 1160~1182.

IMF는 유휴 생산능력과 완화적 통화정책하에서 공공지출의 재정승수는 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시기에는 1.5 이상, 정책금리가 75bp 미만인 경우의 재정승수는 2 이상으로 분석함.¹²⁾

- 특히 고정환율제나 단일통화제도에서 재정 부양책에 따라 이자율의 상승을 허용하지 않을 때 더 강력히 나타나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자율이 낮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승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았고 유효 하한 수준의 재정승수와 유사하게 분석함.

〈그림 14〉 재정승수



주 : 패널1은 t=0 시점에서 공공소비 1%(GDP 대비) 증가 시 실질 GDP의 반응, 패널2와 3에서 푸른색 점은 각각의 경제 여건하에 1년간 재정승수의 점추정치를 의미함. 유효 하한은 정책금리가 75bp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자료 : BIS, Haver analytics, IMF, IMF staff estimates.

재정승수 효과는 정책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수요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가 발생하여 노동시장의 유휴 인력이 있고 통화정책이 재정 부양책을 지원하는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남.

즉,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는 공공지출을 통한 재정투자가 경기 부양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투자가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음. 즉, 정부의 투자가 경제성장률의 개선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보임.

- 정부투자를 나타내는 정부고정자본형성의 생산유발계수가 1.996으로 민간소비지출(1.764), 정부소비지출(1.515), 민간고정자본형성(1.906) 등보다 크게 나타남.
- 정부고정자본형성은 부가가치유발계수(0.808)는 크지 않지만, 수입유발계수는 0.253으로 정부소비지출(0.104)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 국내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가짐.

12)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Chapter2 “Countering Future Recessions in Advanced Economies : Cyclical Policies in an Era of Low Rates and High Debt”.

〈표 5〉 2019년 최종수요 항목별 생산유발계수¹⁾, 부가가치유발계수²⁾ 및 수입유발계수³⁾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비	1.691	1.692	1.693	0.855	0.848	0.852	0.221	0.228	0.227
민간소비지출	1.756	1.761	1.764	0.839	0.831	0.834	0.260	0.269	0.270
정부소비지출	1.514	1.509	1.515	0.899	0.894	0.896	0.101	0.106	0.104
투자	1.943	1.938	1.922	0.814	0.810	0.813	0.290	0.288	0.285
민간고정자본형성	1.931	1.928	1.906	0.818	0.816	0.820	0.294	0.286	0.278
정부고정자본형성	2.012	2.009	1.996	0.810	0.807	0.808	0.239	0.251	0.253
재고증감	1.927	1.829	1.928	0.684	0.663	0.670	0.428	0.501	0.522
수출	1.838	1.828	1.847	0.653	0.643	0.647	0.351	0.361	0.357
최종수요계	1.795	1.790	1.791	0.780	0.773	0.780	0.277	0.283	0.278

주 : 1) 최종수요(국산)에 의한 생산유발액 ÷ 최종수요(국산)

2) 최종수요(국산)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 ÷ 최종수요(국산)

3) 최종수요(국산+수입)에 의한 수입유발액 ÷ 최종수요(국산+수입)

자료 : 한국은행, 201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2. SOC 투자 필요성 및 효과

2016년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에 따르면 인프라 투자의 효과는 단기와 장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¹³⁾

- 단기 효과는 정부의 투자로 인한 원자재 구매와 노동수요 증가 등이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히 투자된 인프라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음.
- 교통 인프라는 이용자들의 여행 비용을 낮춰주고 접근성을 증가시켜 여가와 소비를 촉진함. 기업들은 더 쉽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 네트워크를 갖추어 규모의 경제를 보다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음.
- 또한, 좋은 교통 인프라는 접근 가능한 인적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넓혀줌으로써 가계와 기업 모두의 제품 생산과 최종 서비스 제공이 더욱 수월해짐.

Bom and Ligthart(2014)는 1983년에서 2008년까지 인프라 스톡의 미국 내 총생산(GDP)에 대한 탄력도가 평균적으로 약 0.11 수준인 것으로 분석함.¹⁴⁾

13) Council of Economic Advisers(CEA), 2016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February 2016 Chapter 6 “THE ECONOMIC BENEFITS OF INVESTING IN U.S. INFRASTRUCTURE”.

- 2014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인프라 스톡은 GDP의 약 76% 수준임. 0.11의 탄력도를 함께 고려하면 인프라의 한계 생산은 약 14% 수준임. 이는 1달러의 인프라 투자로 미국 내 총생산이 0.14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인프라에 투자의 생산성 향상은 당해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공간적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를 가짐.

- Tong et. al.(2013)의 연구는 미국의 한 주(州)의 도로 인프라가 1% 증가할 때 당해 주(州)의 농업 생산은 0.03% 증가하고, 인근 주(州)의 농업 생산은 약 0.24% 증가함을 분석함.¹⁵⁾
- Chen and Haynes(2015)는 공간적 파급효과에 의해 교통 인프라가 지역 경제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고속도로가 철도, 공항 등에 비해 국지적인 영향과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함.¹⁶⁾

한편, 우리나라 국회예산정책처(2014)¹⁷⁾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성장 효과는 SOC에 추가적으로 1조원 지출 시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함.

〈표 6〉 정부 재정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구분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의료	사회보장	SOC
추가 경제성장 효과(%p)	0.061	0.057	0.034	0.057	0.076
SOC=100(%)	80.3	75.0	44.7	75.0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 재인용.

건설업 생산품의 생산유발효과는 크고 수입유발은 낮아 인프라 투자의 경제성장 효과는 다른 생산품에 비해 효과적임.

- 건설업 생산품의 생산유발계수는 1.955로 대분류 기준으로 가장 크며, 중분류 기준과 비교 시 소비재제품, 소비자서비스를 제외하고 가장 큼.
-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지 않으나, 0.815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임.

14) Bom, Pedro R. D. and Jenny E. Lighthart. 2014. "What Have We Learned From Three Decades of Research on the Productivity of Public Capital." Journal of Economic Surveys 28(5) : 889~916.
 15) Tong, Tingting, Tun-Hsiang Edward Yu, Seong-Hoon Cho, Kimberly Jensen, and Daniel De La Torre Ugarte. 2013. "Evaluating the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on agricultural output across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30 : 47~55.
 16) Zhenhua Chen and Kingsley E. Haynes, 2015. "Regional Impact of Public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 Spatial Panel Assessment of the U.S. Northeast Megareg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9(3).
 17) 국회예산정책처(2014),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수입유발계수는 건설업 생산품은 0.185로 공산품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여 투자 효과가 국내에 극대화됨.

〈표 7〉 2019년 부문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수입유발계수¹⁾²⁾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농림수산물	1.760	1.798	1.843	0.854	0.840	0.840	0.146	0.160	0.160
광산품	1.842	1.905	1.915	0.894	0.881	0.884	0.106	0.119	0.116
공산품	1.898	1.887	1.903	0.648	0.635	0.638	0.352	0.365	0.362
소비재제품	2.080	2.073	2.073	0.703	0.688	0.694	0.297	0.312	0.306
기초소재제품	1.789	1.785	1.795	0.593	0.558	0.567	0.407	0.442	0.433
조립가공제품	1.921	1.910	1.937	0.657	0.660	0.656	0.343	0.340	0.344
제조임가공, 산업용장비수리	1.905	1.906	1.826	0.854	0.845	0.859	0.146	0.155	0.141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1.536	1.575	1.596	0.598	0.538	0.565	0.402	0.462	0.435
건설	1.972	1.954	1.955	0.811	0.811	0.815	0.189	0.189	0.185
서비스	1.681	1.685	1.684	0.877	0.873	0.873	0.123	0.127	0.127
도소매 및 운송	1.772	1.787	1.782	0.834	0.822	0.821	0.166	0.178	0.179
생산자서비스	1.619	1.626	1.623	0.909	0.908	0.908	0.091	0.092	0.092
사회서비스	1.542	1.537	1.544	0.895	0.890	0.892	0.105	0.110	0.108
소비자서비스	2.038	2.045	2.037	0.825	0.818	0.821	0.175	0.182	0.179
전산업	1.795	1.790	1.791	0.780	0.773	0.780	0.220	0.227	0.220

주 : 1) 국산품 수요 1단위당 생산·부가가치·수입 유발액의 크기.

2) 산업연관표를 1부문, 7부문, 13부문 등으로 통합하여 계산된 유발계수.

자료 : 한국은행, 201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 인프라 투자를 통한 건설 과정에서 직접적인 생산의 증가가 아닌 타 산업의 중간재 수요 증가로 인한 후방연쇄 효과도 인프라(건설업) 부문이 큰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후방연쇄 효과는 한 산업 부문의 생산 증가가 중간재나 원료를 공급하는 타 산업 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건설업의 영향력계수는 1.079로 다른 제품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8〉 2019년 상품별 영향력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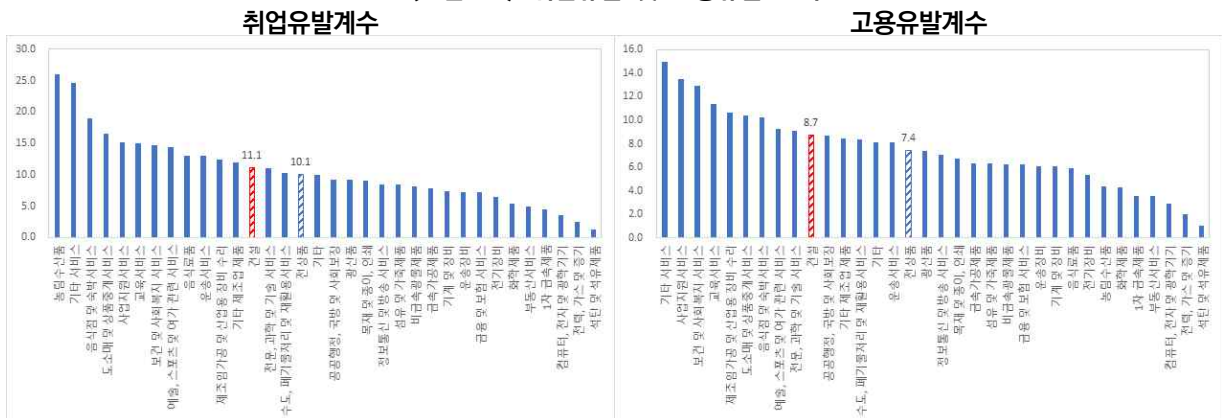
구분	상품명	영향력계수	구분	상품명	영향력계수
A	농림수산물	1.018	D	전력, 가스 및 증기	0.829
B	광산물	1.043	E	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0.950
C01	음식료품	1.186	F	건설	1.079
C02	섬유 및 가죽제품	1.006	G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0.946
C03	목재 및 종이, 인쇄	1.103	H	운송서비스	0.954
C04	석탄 및 석유제품	0.679	I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1.165
C05	화학제품	1.021	J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876
C06	비금속광물제품	1.150	K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886
C07	1차 금속제품	1.014	L	부동산서비스	0.777
C08	금속가공제품	1.129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0.977
C09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0.838	N	사업지원서비스	0.821
C10	전기장비	1.11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736
C11	기계 및 장비	1.115	P	교육서비스	0.809
C12	운송장비	1.293	Q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0.943
C13	기타 제조업 제품	1.14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0.953
C14	제조업가공 및 산업용 장비 수리	0.987	S	기타 서비스	1.077

자료 : 한국은행, 201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2019년 산업연관분석 결과(2021.6)에 의하면 인프라 투자를 약 1조원 증가시키는 경우 일자리는 약 1만 1,093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기준 건설업 상품의 취업유발계수는 11.1임. 이는 건설업에서 최종 수요가 10억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11.1명에 이른다는 것임.
- 건설업 상품의 취업유발계수를 타 산업 상품과 비교해보면, 농림수산물과 서비스 다음으로 취업유발 효과가 높고, 전상품 평균보다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고용주를 제외한 피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효과인 고용유발 효과에서도 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 10억원당 8.7명을 기록했음. 이는 전상품 평균인 7.4명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그림 15〉 취업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



자료 : 한국은행, 2019년 산업연관표(연장표).

- ❑ SOC 예산 증가는 일자리 증가 효과, 특히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증가 효과가 커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옴.
- ❑ 정부 재정지출 효과를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2014)¹⁸⁾ 연구에 따르면, SOC 분야의 고용 승수는 0.0219로 타 부문 대비 고용 승수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¹⁹⁾

〈표 9〉 1조원당 정부 지출에 따른 고용 승수

구분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의료	사회보장	SOC
고용승수	0.0199	0.0191	0.0116	0.0186	0.0219
사회보장=100	107.0	102.7	62.4	100.0	117.7
SOC=100	90.9	87.2	53.0	84.9	10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4).

- ❑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는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저소득층 고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

- Kawabata(2003)의 연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대중교통망 확충이 자동차가 없는 저소득층의 고용률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특히 이들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가지는 데에 기여함.²⁰⁾
- 미국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CEA)의 2018년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의 증가는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노동수요의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직될 가능성이 높은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함.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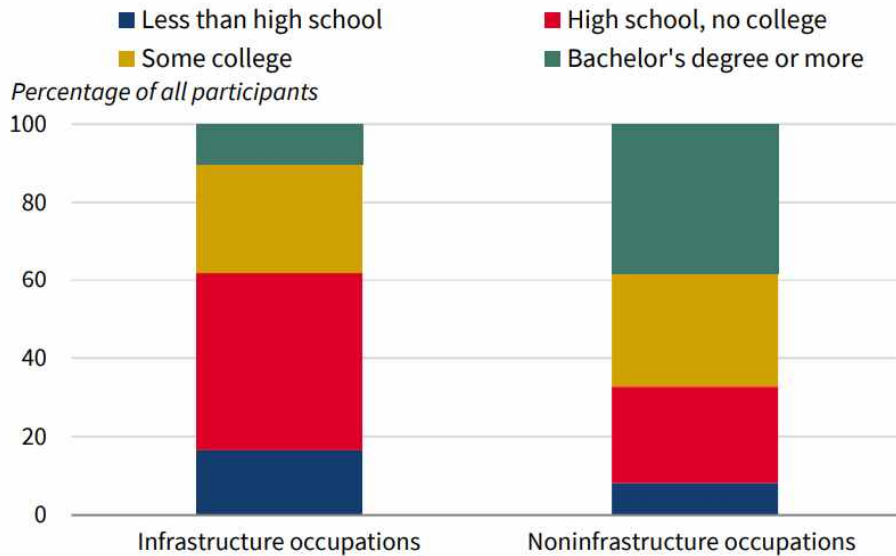
18) 국회예산정책처(2014),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19) 일정 산업의 고용 증가를 N_i , 전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 증가를 N 이라고 한다면, $N = K \cdot N_i$ 이 되는데 이때 K 를 고용 승수라고 함.

20) Kawabata, Mizuki. 2003. "Job Access and Employment among Low-Skilled Autoless Workers in US Metropolitan Areas." *Environment and Planning A* 35(9) : 1651~1668.

21) Council of Economic Advisers(CEA), 2018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February 2018 Chapter4 "Infrastructure Investment to Boost Economy".

〈그림 16〉 미국 인프라와 비인프라 참여 인력의 교육 수준 비교(2017)



자료 : Council of Economic Advisers(CEA), 2018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시 지니계수는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SOC 분야 지출 1조원당 지니계수(Gini coefficient)²²⁾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²³⁾은 0.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른 조건들이 모두 일정하다는 하에, SOC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기존보다 10조원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지니계수는 약 0.2% 하락하게 되며, 소득 평등도 순위는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4위 (0.295)에서 12위(0.294)로 상승하게 됨.²⁴⁾

■ **또한, OEC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도 소득 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함.²⁵⁾**

-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을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함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었고, 최근에는 인프라 투자가 소득 불평등 개선과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²⁶⁾

22)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준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함.

23)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분자로 하고 상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분모로 하여 나눈 비율로, 소득 분포 상태를 나타냄. 클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한 것을 의미함.

24) 2015년 기준으로 독일이 0.293으로 11위, 프랑스가 0.295로 12위를 기록함; statOECD의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자료 중 한국 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5년 기준임.

25)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 「소득 불평등과 인프라 투자」, 『건설동향브리핑』 참조.

26) World Bank (2014), 「Infrastructure, Growth, and Inequality : An Overview」 참조.

- 반면, OECD(2016)에 따르면, 정부 재정에 기반한 지나친 복지지출 확대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둔화 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힘.²⁷⁾
- 이에, OECD(2015)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혁과 더불어, 인프라 공급 확대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핵심적인 수단임을 강조함.²⁸⁾

■ 지역 생산성 향상 효과 관점에서 보면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복지 지출과 상호 보완성(complementarity)이 존재함.

■ 사회복지 지출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프라 자본의 축적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약 2~3배 크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²⁹⁾

- 인프라 투자가 지역별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별 인프라 축적 수준(SOC 예산 비중)과 사회 안전망 수준(사회복지 지출 비중)을 고려하여 분석함.
- 구체적으로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경우 1.248이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 0.409로 추정됨. 또한, 인프라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경우 1.914이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 1.080으로 추정됨.³⁰⁾

27) OECD(2016), 「The Effect of the Size and the Mix of Public Spending on Growth and Inequalit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1344 참조.

28) OECD(2015), 「Inequality and Inclusive Growth : Policy Tools to Achieve Balanced Growth in G20 Economies, Framework Working Group」 참조. "Especially in emerging G-20 economies, provision of infrastructure, health care and public administration reforms can play a role in reducing inequality."

29) 나경연(2018), 「인프라 투자의 지역 생산성 및 소득 격차 파급 효과」 산업혁신연구, 제34권 제2호 참조.

30) 인프라 예산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인프라 예산 비중이 1% 증가할 때, 총요소생산성은 1.914%p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IV SOC 투자의 방향

1. SOC 예산과 Stock

-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3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634.7조원으로, 2022년도 예산(604.4조원) 대비 4.4% 증가한 수준임.
 - 경제회복, 양극화 대응, 경제사회 구조전환, 인구총격 대응, 국민안전을 위해 27.0조원 증액을 계획하고 있음.

〈표 10〉 2021년 분야별 예산 요구안

(단위 : 조원)

구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A)	2023년 예산(B)	증감액(B-A)
◇ 총지출	558.0	607.7	634.7	27.0
1. 보건·복지·고용	199.7	217.7	232.2	14.5
2. 교육	71.2	84.2	84.8	0.6
3. 문화·체육·관광	8.5	9.1	9.1	0.0
4. 환경	10.6	11.9	12.9	1.0
5. R&D	27.4	29.8	32.3	2.5
6. 산업·중소·에너지	28.6	31.3	32.6	1.3
7. SOC	26.5	28.0	28.7	0.7
8. 농림·수산·식품	22.7	23.7	24.0	0.3
9. 국방	52.8	54.6	57.7	3.1
10. 외교·통일	5.7	6.0	6.2	0.2
11. 공공질서·안전	22.3	22.3	23.4	1.1
12. 일반·지방행정	84.7	98.1	100.4	2.3

주 : 2021, 2022년은 국회 확정 예산이며, 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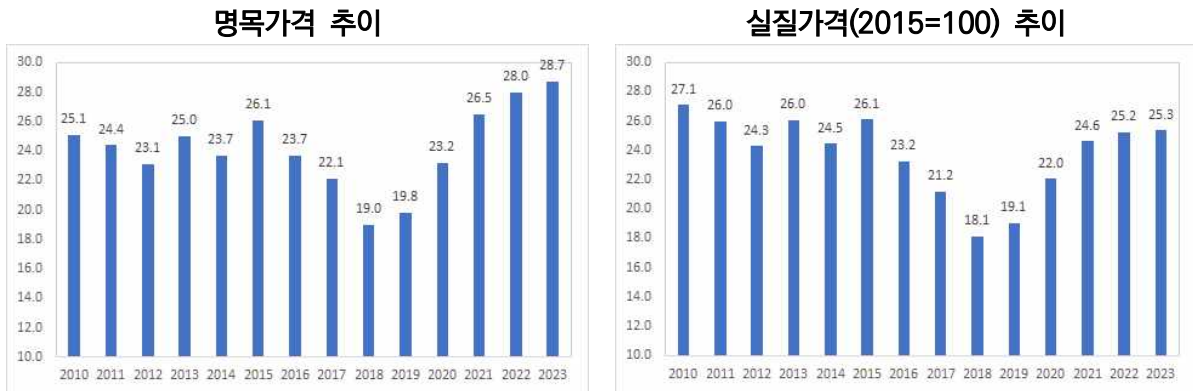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 + SOC 예산은 2018년을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0.7조원 증가한 28.7조원임. 이를 2015년 기준 실질가격으로 전환하면 25.3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금융위기 직후보다 낮은 수준임.
 - 2023년 SOC 예산은 명목가격으로 전년 대비 0.7조원이 증가하나, 실질가격으로는 0.1조원 증가에 불과함.
 - 실질가격 기준 2023년 SOC 예산은 25.3조원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SOC 예산 27.1조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SOC 예산(2014~2017)은 23.9조원(명목가격 기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연평균 SOC 예산은 명목(23.3조원) 및 실질가격(21.8조원) 기준 모두 줄어들음.

〈그림 17〉 정부 SOC 예산 추이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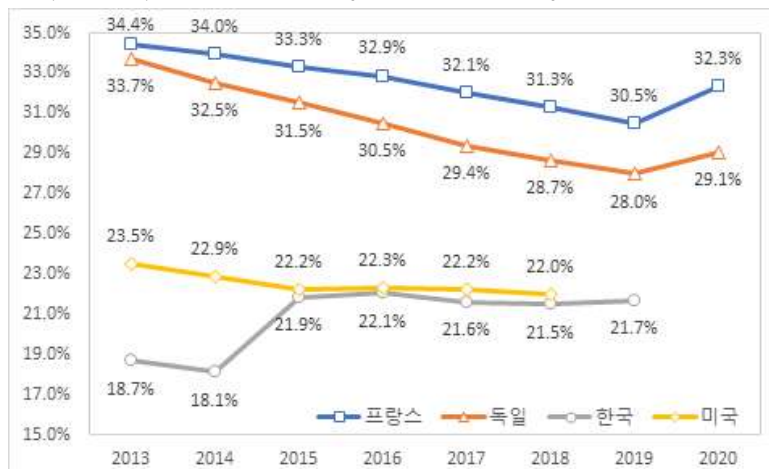
주 : 실질가격은 한국은행 GDP 디플레이터(2015=100)를 사용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은 물가상승률 전망치 3.1%, 2.0%로 가정함.

자료 : 기획재정부 각 연도 보도자료.

▣ 그동안 SOC 투자를 지속하여 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SOC 자본스톡은 프랑스, 독일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낮은 수준임. 특히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5%p 이상 낮은 수준임.

〈그림 18〉 GDP 대비 SOC(육상시설+항공시설) 자본스톡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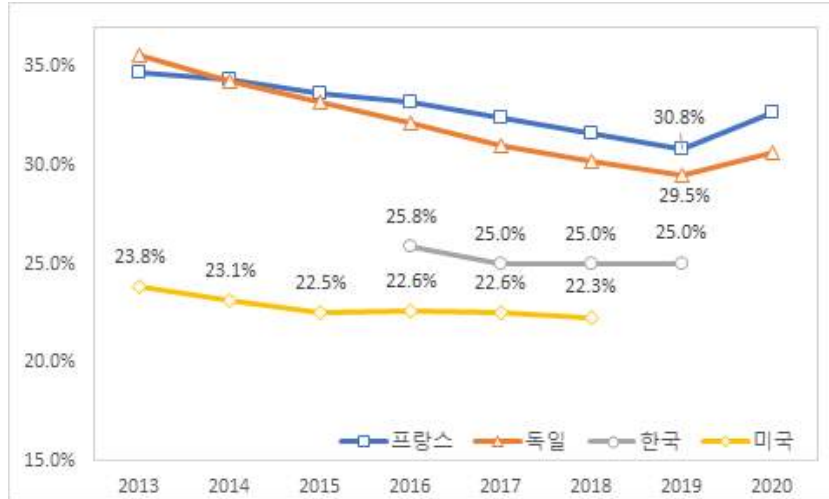


주 : OECD의 인프라 capital stock을 GDP로 나눈 값임.

자료 : OECD. Stat.

- 한편 상하수도 관련 시설을 추가한 우리나라의 SOC 자본스톡은 2018년 기준으로 25.0%로 미국 (22.3%)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나, 여전히 프랑스 독일보다 낮은 비중을 기록함.

〈그림 19〉 GDP 대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의 비중



주 : OECD의 인프라 capital stock을 GDP로 나눈 값임.

자료 : OECD. Stat.

❑ 우리나라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경제가 성장한 정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SOC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 2006년 기준 전체 30개의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1.51)이 29위로 OECD 가입국 중 상당히 낮은 순위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도로 stock의 수준이 낮음.³¹⁾ 도로현황조사서에 따르면 2021년은 1.57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임.³²⁾

2. 적정 SOC 투자 규모와 예산

(1) 내생적 성장모형에 따른 적정 SOC 투자 규모

❑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은 국가 간 지속적인 성장을 격차를 모형의 내생적 변수 간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하는 모형으로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를 평가하는 데 사용함.

- 소비자의 생애 효용함수와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바탕으로 최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31) 서울대(2013.12), 사회기반시설 투자정책 변천과 정책현안 분석 연구, pp.88.

3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3.5.29)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2012년 기준으로 1.49로 분석하였으며, OECD 국가 중 29위로 발표한 바 있음.

SOC 스톡 수준 및 GDP 대비 투자비율을 도출함(〈표 7〉 참조).³³⁾

-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06, 2012)은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적정 SOC 스톡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SOC 투자 규모의 적정성 평가를 위하여 사용함.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을 통해 적정 SOC 투자 규모의 추정을 위해서는 감가상각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각종 선행연구 및 주요 기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정함.

- 류덕현(2008, 2012), 한국교통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2010) 국토교통부(2016)의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SOC 구축물의 산출탄력성 0.255를 적용함.
- SOC 감가상각률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와 같이 2%를 가정함(국토교통부, 2016, p.72).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실측치를 사용하였으며, 2022년, 2023년은 한국은행 전망치 3.0%, 2.5%를 사용함.

또한, 정부의 SOC 투자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투자 등의 계획치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SOC 투자 예산 도출을 위해 다음의 과정이 선행됨.

- 중앙정부 SOC 예산은 국회 확정 예산을 사용하였고 2023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함.
- 지방정부 SOC 예산은 지방재정 세출예산에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을 반영하고, 2023년은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의 연도별 투자집행 내역을 사용하여 최근 5년 추세를 분석하고 2023년까지 시계열을 구축함.
- 민간투자사업은 e-나라지표에서 제공하는 민간투자사업 현황의 추세를 분석하여 그 결과치를 2023년까지로 확장함.

내생적 경제 성장모형에 의한 경제성장률 2.5~3.0% 성장을 위한 적정 SOC 투자 수준은 GDP의 2.52%에서 2.80%로 추정됨.

2021년과 2022년 분석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표 11〉과 같음. 2023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8조원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현재 예상 지출 금액보다 약 2.9조원의 추가적인 SOC 투자가 필요함.

33)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도출은 Barro and Sala-i-Martin(1995), Aschauer(2000), Kamps(2005)를 참조.

- SOC 투자의 2023년 예상 지출 규모(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투자+공기업 투자)는 54.6조원 수준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57.5조원으로 예상 지출 규모 대비 2.9조원이 부족한 수준임.
- 2023년 경제전망이 한국은행 전망치에 도달한다는 가정하에 분석되었으며, 경제가 그 이상 등락할 경우, 연간 적정 SOC 투자 규모도 증감할 수 있음.
- 미국의 GDP 대비 SOC 예산 비중은 연평균 2.58% 수준으로, 추정된 우리나라의 적정 SOC 투자 비중은 적절한 수준이나, 미국 SOC 예산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상하수도 등 예산의 합으로 우리나라의 SOC 예산 대비 지역개발, 산업단지 등이 제외되어 있음.³⁴⁾
- 2022년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진 가운데 전망 수준보다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큼에 따라 SOC 투자의 과부족 정도는 더 커질 수 있음.

〈표 11〉 SOC 지출 과부족 규모 분석 및 추정

(단위 : 십억원)

회계연도	가정		A.적정 지출 규모 (전망치 반영)	B.예상 지출 금액(=a+b+c+d)				E.과부족 금액 (=A-B)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a.정부 지출 (국가재정 운용계획)	b.지방정부 지출 (예측)	c.민간투자 지출 (예측)	d.공기업 투자 지출 (예측)		
2022	3.0%	3.1%	61,147	53,359	28,000	14,938	724	9,697	-7,788
2023	2.5%	2.0%	57,509	54,616	28,700	15,237	738	9,941	-2,892

2. SOC 투자의 방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제 선순환 구조의 유도를 위한 SOC 투자가 필요함.

-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에 중저소득층이 취약한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기 전 선제적 대응을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안전과 균형발전을 감안한 SOC 투자의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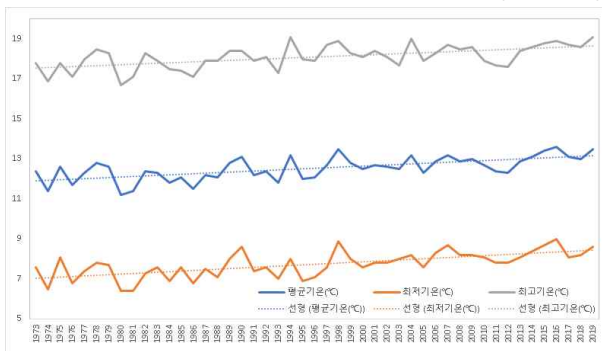
34) Congressional Budget Office(2018), Public Spending on Transportation and Water Infrastructure, 1956 to 2017

(1)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간 기온 및 강수량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기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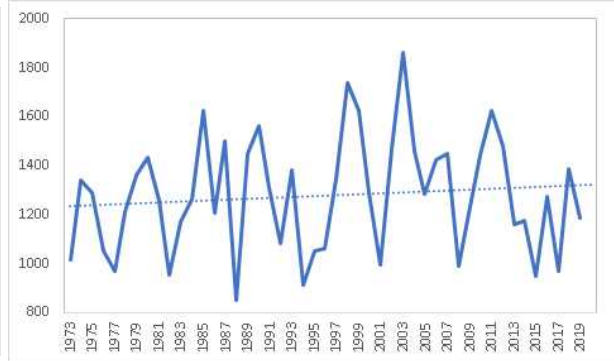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기온은 1973년 대비 평균기온 1°C, 최저기온 1°C, 최고기온 1.3°C 상승함.
- 1973~2019년의 강수량 선형 추세선은 연간 1.8mm씩 증가하는 우상향 추세를 보임.

〈그림 20〉 전국 연간 기온(최고, 최저, 평균) (단위 : °C)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그림 21〉 전국 연간 강수량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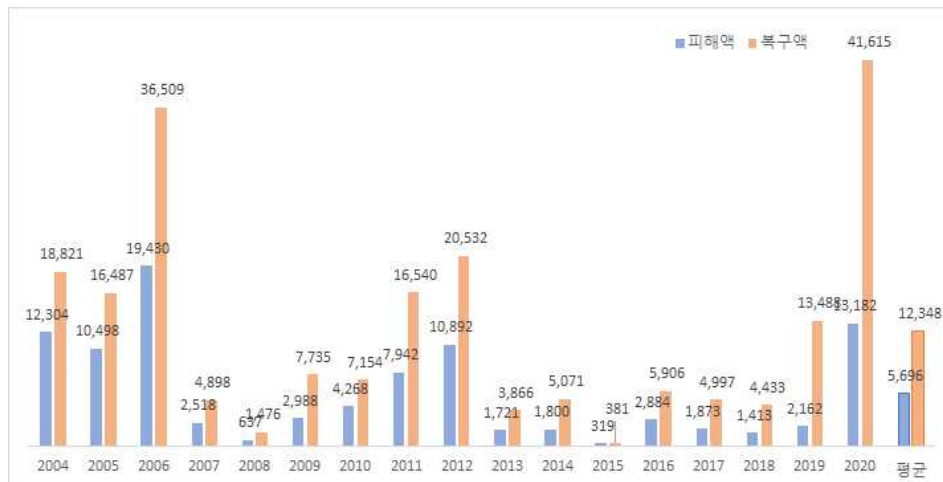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

■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1.8조원 가량이 피해·복구액으로 사용됨.

-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2004~2020년 기간 중 연평균 자연재난 피해액은 5,696억원이며, 복구액은 1조 2,348억원임.

〈그림 22〉 자연재난 피해액 추이(2004~2020)

(단위 : 억원)



자료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연도.

- ❖ 특히, 우리나라는 호우·태풍이 자연재난 피해·복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2019)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을 연간 11.5조원으로 추정함.³⁵⁾

 - 향후 2020~2060년 동안 발생 가능한 연간 자연재난 피해액은 2002년에 발생한 최대 피해액의 1.4배인 11조 4,794억원으로 추정함.

- ❖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선제적인 시설물 투자를 통한 대응이 필요함.

 - 특히, 댐은 용수 전용댐을 중심으로 노후화 비율이 63.5%에 달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노후 상하수도의 경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지반이 약화되는 경우 누수가 나타나고, 이로 인한 싱크홀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정비를 통한 안전 강화를 실시해야 함.
 - 상습 침수지역의 경우 지하 배수터널, 우수저류시설 등 대규모 대수시설의 확충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 또한, 올해 남한산성 산불, 양구 산불, 울진 산불 등 많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 만큼 산불을 조기 진화할 수 있는 사방댐³⁶⁾ 등 산불 진화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함.

(2) 노후인프라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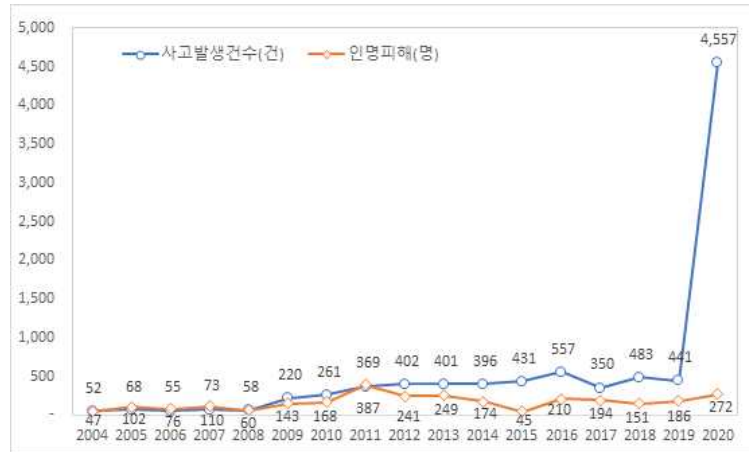
- ❖ 최근 국내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행복감 하락 및 불안감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각종 시설물(건축물, 교량, 육교 등)에서 노후, 지반 약화, 안전조치 부족 등으로 인한 붕괴사고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20년은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들의 붕괴로 인하여 사고건수와 인명피해가 급격히 증가함.

35) 이미연(2019), 「재난피해 지원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36) 사방댐은 급류가 강바닥을 파고 양쪽 산기슭을 깎아서 산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 토사(土砂)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댐이나 산불 발생 시 급수시설로도 사용됨.

〈그림 23〉 국내 붕괴사고 연도별 발생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각 연도.

기후변화와 결부되어 인프라의 노후화 및 성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된 시설물의 비중도 17.5% 달하고 있음.

- 붕괴 또는 기능 상실 시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댐, 하천 관리시설, 상·하수도, 절토 사면 등 주요 시설물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현재(2020.11 기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는 1, 2, 3종 시설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2만 7,997개에 이르며 전체 시설물의 17.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2030년에는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7만 905개에 달하며 전체 시설물 중 44.3%로 2개 중 1개가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일 전망이다.

〈표 12〉 준공연도별 시설물 현황(2020.11 기준)

(단위 : 개)

준공 이후	교량	터널	항만	댐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공동구	건축물	합계
합계	33,117	4,920	496	615	6,976	2,354	3,553	4,598	39	103,713	160,381
30년 이상	6,319	697	108	390	1,494	505	401	355	9	17,719	27,997
비중	19.1%	14.2%	21.8%	63.4%	21.4%	21.5%	11.3%	7.7%	23.1%	17.1%	17.5%
21~30년	10,453	874	141	77	1,588	575	491	855	10	27,844	42,908
비중	31.6%	17.8%	28.4%	12.5%	22.8%	24.4%	13.8%	18.6%	25.6%	26.8%	26.8%
11~20년	12,146	1,666	129	72	1,756	733	995	2,440	3	29,166	49,106
비중	36.7%	33.9%	26.0%	11.7%	25.2%	31.1%	28.0%	53.1%	7.7%	28.1%	28.1%
10년 이내	4,199	1,683	118	76	2,138	541	1,666	948	17	28,984	40,370
비중	12.7%	34.2%	23.8%	12.4%	30.6%	23.0%	46.9%	20.6%	43.6%	27.9%	27.9%

자료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1.2)

인프라의 급격한 노후화의 진행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함.

-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인프라 총조사’를 진행해 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국민안전 등을 고려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노후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3) ‘빅 프로젝트’ 발굴

마지막으로, 현 경제 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빅 프로젝트의 발굴·실행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물가상승률이 높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소비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공공의 투자에 의한 경제 선순환 구조의 유도가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그리고 국민 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빅 프로젝트’의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 특히, 대통령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별 공약사업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국토의 발전을 고려한 사업들로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표 13〉 윤석열 대통령 지역별 공약사업

지역	주요 개발 공약	지역	주요 개발 공약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부선(서울역~당정) 지하화 ▶경원선(청량리~도봉산) 지하화 ▶경인선(구로~인천역) 지하화 ▶고속도로(한남~양재) 지하화 ▶신분당선 서북부(용산~고양 삼성) 연장 ▶서울 구로·창동·서울역 복구 등 10개 철도차량기지 지하화·데크화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공급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기 GTX 노선 연장(A:운정~평택, B:송도~춘천, C:동두천~평택) ▶2기 GTX 노선 3개 추가(D:수도권 남부, E:수도권 북부, F:수도권 거점지역 순환) ▶서울~연천 남북고속도로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송파~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여주~양평(37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제1순환고속도로 부천~계양 지하화 ▶지방도 과천대로(309호선) 지하화 ▶경강선 연장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평택~부발 전철 신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미연결구간 완성 조속 추진 ▶지하철 8호선(모란~오포) 연장 추진 ▶4차 산업 기술 연구단지 조성 ▶AI,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콘텐츠 중심 R&D 연구개발 단지 조성 ▶제3국립현충원 경기 북부지역(연천) 신설
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덕도 신공항, 연계 교통수단 등 유치 인프라 확충 ▶55보급창 및 8부두 도심 군사시설 이전 ▶북항 1, 2단계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자성대~부산시민공원 간 도심 일원 대개조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내륙(화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영동북부(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 ▶DMZ(철원~고성) 고속도로 건설 ▶동서고속도로(삼척~영월) 양방향 동시 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물류지구, 에어시티지구, 해양신산업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경부선 철도(화명~가야차량기지 10.7km) 지하화 ▶부울경 GTX(부전~마산) 건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설치 ▶가야철도기지창 스마트도시 조성 ▶범천철도차량기지 이전 ▶경부선 냉정~범일 구간 신설 ▶황령산 제3터널, 반송터널, 도시철도 중구순환선 영도트램 추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오시리아,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추진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완성 ▶24시간 아동전문 응급병원 설립 ▶동남권 ICT 트라이앵글(사상 ICT 융합, 센텀스마트, 영도해양 ICT 클러스터) ▶동남권 파워반도체 S벨트 구축 ▶동남권 디지털혁신파크 및 제2센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맥도 100만평 그린시티 조성 ▶울속도생태공원, 에코델타시티 등 연계한 그린 스마트 파크시티 조성 ▶마린 바이오(해양의약품, 해양바이오에너지개발) 산업 특화 지원 강화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 산업 육성 ▶해사전문법원 설립 등 해양금융·해운기업클러스터 구축 ▶부산 UN평화문화공원화 사업 추진 ▶북항 유라시아 컬처플랫폼 조성 ▶웰니스 의료관광허브 조성 ▶남항 마린토피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내륙선(원주~철원) 철도 건설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 개량 사업 조기 착공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조기 완공 ▶동해항 3단계 민자 선석 정부 재정사업 전환 추진
<p>대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 ▶대구 도심~통합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자율주행 모빌리티 복합단지 건설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및 복합문화 신도시 조성 ▶국립 창작 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근대시각예술 콤플렉스 조성 ▶글로벌 문화예술융합 콤플렉스 조성 ▶달빛내륙철도 건설 ▶경부선 고속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금호강 친수 문화공간 조성 및 주요거점 개발(금호워터프론트 조성) 	<p>충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충북~경북 울진) ▶제천~괴산 고속도로 신설 ▶원주~오송 간 철도 고속화 ▶경부·강원~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X축 완성 ▶방사광가속기 데이터 네트워크 센터 구축 ▶방사광가속기 활용지원센터, 게스트하우스, 데스트베드 등 건립 ▶뷰티산업 종합지원센터, 화장품 디자인·패키징 센터, 뷰티 체험홍보관 건립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확충 ▶중원 휴양레저타운 조성 ▶충주 국가정원 조성 ▶청주 복합스포츠타운 설립
<p>인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공항철도 건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경인고속도로(남청라~신월IC) 지하화 ▶인천대로(문학C~서인천C)지하도로 건설 	<p>충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청내륙철도(서대전역~삽교역 간 74km 복선전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서산~충북~경북울진, 322.4km)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청래C까지 경인고속도로 시점 연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지정 ▶바이오 원부자재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영종 항공정비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신성장 첨단산업, 수소 모빌리티, 로봇의 메카 조성 ▶제2의료원 설립 지원 ▶부평연안부두 트램 조기 추진 ▶아쿠아리움 설치 ▶월판선 인천역까지 연장 운행 ▶연중~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핵심 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 탄소중립 산업 육성, 스마트 그린 국가 산업단지 조성 ▶천안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 ▶국방연구혁신 거점화 및 국방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국립경찰병원 설립 ▶의료광역 통합시설 구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가로림만 오션블루 국가해양정원 조성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광주~영암 간 속도 무제한 초고속도로 건설(47km)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198.8km) ▶도심 광주공항 이전 부지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 ▶복합쇼핑몰 광주 유치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추진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새만금 도로·철도 및 산업 입지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전북금융센터 건립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전주~김천 도서횡단철도 건설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추가 건설 ▶익산 국가식품플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 및 국제농식품비즈니스센터 건립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태권도 대학원) 건립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전 중심 100km 순환 고속도로 건설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주요도시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호남고속도로(회덕JTC~서대전JTC) 확장 ▶현충원IC, 유성IC, 서대전 및 북대전IC 만남의 광장 확대 개선 ▶경부선·호남선 철도 대전 구간 지하화(경부선 13km, 호남선 11km) ▶신탄진역, 대전조차장, 대전역, 서대전역, 가수원역 등 역세권 개발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조성(대전)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대전산업단지 리모델링 통한 스마트 그린 혁신산업단지 조성 ▶감천변 편입지역에 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 입주 공간 등 마련 ▶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용산업용지 공급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우주 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우주기업 특화 산업단지 조성, 우주기업 지원센터 구축) ▶우주발사체 시험·인증센터, 우주 과학교육 테마파크 구축 ▶익산-전주~남원~곡성~구례~순천~여수 구간 고속철도(KTX) 고속화 ▶광주-전남 광역고속도로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 ▶영암~진도 고속도로 건설 ▶광양항 3-3단계 완전자동화 '컨터미널' 구축 ▶광양항 배후단지 확충, 연결도로 건설 ▶면역치료 특화 의료서비스,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국가 백신·면역 셀뱅크(Cell-bank), 치료·치유 과학화 R&D 센터 구축 ▶장흥~고흥(특량도), 해남~신안 장산 연륙교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진도~조도, 완도 보길~노화~소안 연도교
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공항 활주로 및 청사 확장 ▶도시철도(트램) 건설(태화강역~신복로터리,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 전자부품거점 단지 조성 ▶스마트 항공벤처 연구단지 조성 ▶군수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정역~아음사거리) ▶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제2명촌교 건설 ▶ 의료복합타운 건설 ▶ 도심권 상급종합병원 건립 검토 ▶ 울산의료원 조속 설립 추진 ▶ 종합대학 울산 유치 및 인근 지역 신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부선·중앙선 연결(서대구~신공항~의성) ▶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구축 ▶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구축 ▶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 영일만 대교 건설 ▶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 원자력 화용 수소생산·수출 국가산업단지 조성 ▶ 탄소중립 에너지 미래관 건립 ▶ 양성자 가속기 규모 확충 및 가속기 연계 차세대 혁신 신약개발 클러스터 조성 ▶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구축 ▶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조성
<p>세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 대전~세종청사~조치원~청주공항 연결 광역교통망 구축 ▶ 충청권 광역철도망 조기 건설 ▶ 충청권 상생협력 국가산업단지 조성(세종) ▶ 국립 중입자가속기 연구센터·의료센터 설립 ▶ 세종 디지털미디어센터 건립 	<p>경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조성 ▶ 진해신항 조기 착공 ▶ 경남 스마트 물류도시 조성 ▶ 동대구~창원 간 고속철도 ▶ 남부내륙철도(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 창원산업선 및 진해신항선 구축 ▶ 조선업 스마트아드와 친환경 선박 제조 클러스터 구축 ▶ 경남 미래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 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조기 착공 및 거제역~가덕신공항까지 연장 ▶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 경·부·울 광역철도망 구축 ▶ 경남 산업·관광 거점 연계 광역도로망 확대 등 ▶ 통영 국제 해양관광마리나 허브 조성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기 조성 ▶ 서부 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 ▶ 국립 트라우마 치유복합단지 조성 ▶ 국가기록원 안전기록관 설립 ▶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 순산자원조성 복합센터 건립
<p>제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 컨테이너부두 추가 건설, 지능형 물류연계체계 구축, 혁신물류 배후단지 조성 ▶ 예술인회관 설립 ▶ 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 ▶ 알뜨르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 에어시티 지구, 스마트혁신 지구, 항공물류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 제주형 메디컬 푸드·K-뷰티 산업클러스터 구축 ▶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신축 ▶ 제주 권역 내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V 결론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이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
-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경우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2022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보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3%p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연평균 120달러를 보이는 경우는 경제성장률 0.4%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4%p 상승, 경상수지 5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 ❖ 미국은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그동안 지속되었던 저금리를 벗어나 중립금리까지 약 2%p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미국 금리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금리가 1%p 상승하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1년 동안 0.52% 감소, 물가상승률은 0.02% 상승, 수출은 0.74%, 수입은 0.7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나 소비심리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와 무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 한편,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 역시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2.9조원 정도 부족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 비중은 25.0%로 프랑스 30.8%, 독일 29.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전체 30개의 OECD 가입국 중 29위이

며, 2021년은 1.57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임.

-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 규모에 비해 적은 SOC의 투자는 '경제성장 도모', '소득불평등 해소',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SOC 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엄근용(부연구위원·kyeom@cerik.re.kr)